

아침세평

박병진

금구초 교장·교육학박사



저는 초임 교사 시절부터 아이들과 부대끼며 어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던 교사였다. 시골에서 근무하던 청년 교사 때는 제자들과 어울려 학교 뒤뜰에서 텐트를 치고 자주 야영을 하기도 했고, 소풍 날이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밤을 새워가며 다양한 게임 도구를 만들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이들의 함께한 수많은 체험 활동과 그 속에서의 추억과 헌신은 내 교직생활 전체를 흐르는 가장 뿌듯한 보람이고 자랑이었다.

그 즐거움은 교장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져, 현재 교육 기부단체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 진심이 닿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그만큼 교실 밖에서 이뤄지는 생생한 배움, 즉 ‘체험 학습’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학교 교사에게, 교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선생님, 이제 체험 학습을 다녀오시라 먼저 권하지 않

학교 체험 학습, 다녀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체험 학습을 사랑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이토록 위촉된 데에는 최근 교육계를 강타한 비극적인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솔 교사 2명은 학생 지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현장에 섰던 전국 교사를 공포와 자괴감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학교 밖 체험 학습은 교사들에게 설렘이 아닌, 형사 책임을 담보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다.

저는 교장으로서 교사의 그 불안감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라고 등 떠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대도 변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가정에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 학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학교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 여행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미 학교 밖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체험 기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오는 ‘찾아오는 체험 학습’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충분히

다채롭고 교육적인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옹기 내어 체험 학습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교사가 있다면, 저는 학교 차원의 안전 대책과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초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이 될 6학년의 수학여행만큼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변함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하지만 씩씩한 마음은 감출 수 없다. 만약 체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체육 수업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시스템은 교육의 본질을 위축시킬 뿐이다.

교육 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 교외 체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 문제로 교외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찾아오는 체험 학습’ 등에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란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도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불안함 없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체험 학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기고

이양현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 주임



광주가 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쳐온 지난 10여년은 여러 지방 도시가 비슷한 고민을 나누게 된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준 시간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서울 등 대도시의 모델을 참고하면 지역에서도 청년 인구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자리했고,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서로의 프로그램을 참고하며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광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형 청년정책’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도들을 꾸준히 더해오며 청년의 삶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최근 청년 세대는 행정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도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방향을 차분히 돌아보고 조정할 지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 청년정책이 비슷해졌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도, 인정을 미룰 수도 없다. 취업 프로그램, 임대주택, 창업지원, 심리상담, 문화 프로그램까지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겉으로 보기엔 ‘균형 발전’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정체성이 열어지고, 지역 청년의 독특한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드러난다. 광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정책이 나쁜 게 아니라, 정책이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요즘 청년은 단순히 게 집이나 직장을 따라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속도에 맞춰서 도시를 고른다. 일과 여가의 비중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광주

을 어떻게 가져갈지, 인간관계를 넓힐지 좁힐지, 기술 발전을 얼마나 활용하며 살지 같은 기준이 도시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년에게 도시는 생계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취향의 무대이고, 공공 서비스는 ‘지원’이라기보다 하나의 ‘생활 인프라’가 가깝다. 그러니 도시가 이러한 생활 구조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사업을 늘려도 제감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광주 청년층이 다시 떠나는 공동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조건 주거와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다. 문화적 밀도, 일과 삶의 즉시 전환성, 커뮤니티 경험, 이동성과 주거 안정성이 하나의 연결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도시에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청년 질문에 광주가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실행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 방향이다. 청년정책의 추진 방식을 ‘프로그램 제공’에서 ‘생활 구조 구축’으로 옮기는 것. 대도시 모델을 뒤쫓는 정책이 아니라, 광주에서만 가능한 생활권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 청년정책을 부서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다시 묶어야 한다. 광주에는 집은 북구, 일은 서구, 여가는 동구에 있는 청년이 많다. 기존 정책은 사·구·센터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이동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주거·교통·일자리·심리건강·문화·커뮤니티를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생활 단위’로 묶어내고, 그 속에서 정책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 바꾸쳐 하나, 상당 한 번으로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둘째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심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청년 의견수렴이 공

청하나 설문에서 끝나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의 일부를 청년이 직접 결정하고, 청년 공간의 운영을 청년단체·로컬 창작자·지역 커뮤니티가 맡으며, 시정의 주요 어젠다 속에 청년의 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의 20~30대는 행정이 참여를 요청한다고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라, ‘함께 운영할 톨’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참여의 의미를 느낀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도시에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오래 머문다.

셋째 광주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한 ‘로컬 기반의 생활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종합극장 같은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재능을 연결해 주는 공간, 크고 작은 창작을 시도할 수 있는 스튜디오, 로컬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 같은 생활 중심의 문화공간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공간들은 행정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될 때 애정과 유연성을 가지며 더 오래 지속된다.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서 생활문화와 청년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는 방향이야말로 청년이 체감하는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결국 대도시형 청년정책보다는 지역에 맞는 청년 친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는 서울이 될 필요도, 다른 도시를 모방할 이유도 없다. 광주에 사는 청년의 삶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도시, 그 삶을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청년이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다가를 미래가 빠져나간다는 뜻이고, 청년이 돌아온다는 것은 도시가 미래를 회복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삶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다.

취재수첩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의 제도약을 기대하며

송 하 종

문화체육부 기자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지난 1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올 시즌 광주도시공사의 첫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SK수구글라이더즈. 이 경기에서 통합 2연패 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지난 2010년 창단한 광주도시공사는 2019년 오세일

감독 부임 이후 다크호스로 떠오른 팀이다. 2021년 정규리그 10승 달성 및 4위 도약에 성공했고, 2022년에는 리그 2위 안착과 함께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했다. 2023년 역시 리그 2위 달성과 함께 플레이오프 3위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2024년 리그 7위로 4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뒤, 지난해에도 리그 6위로 두 시즌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도시공사가 최근 고전한 이유는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다. 배태랑 송혜수와 이아현 등이 컨디션 난조로 흔들리면서 팀의 성적 또한 하락했다. 앞은 선

수중 또한 발목을 잡는 요소였다.

결국 광주도시공사는 2년 연속 좌절했던 포스트시즌 진출을 목표로 올해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단행했다.

새로운 주장 완장은 김금정이 차게 됐고, 리그에서 10년 이상 활약한 이효진과 최수지, 함지선, 강주빈 등 베테랑들을 영입했다. 뿐만 아니라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윤별과 박소망(이상 조대여고), 최연아(정음여고) 등 3명의 선수들을 지명했다.

경험치 측면에서는 확실히 성장했다. 대체 자원이 없어 허덕였던 기존과 달리 백업 선수층 역시 강화됐다. 물론 신구조화가 완벽히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지난해와는 다르게 기대가 되는 시즌이다.

광주도시공사가 올 시즌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순항하며 광주의 불만한 겨울 스포츠 자리 잡길 바란다.

사설

광주 초교 취학 아동수 1만명선 붕괴됐는데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2026학년도 지역 초교 예비소집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지난해보다 취학 대상 아동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취학 대상 아동 수는 9455명으로 올해 처음 1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1만238명 대비 783명이 감소했으며 예비소집 참석자 역시 8929명으로 1년 새 810명 줄었다. 취학 대상 아동 수는 2020년 1만3619명, 2021년 1만3401명, 2022년 1만3264명, 2023년 1만3050명 등 1만3000명대를 유지하다 2024년 1만926명으로 2000여명 줄었고 지난해 1만23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삼도초와 광주중앙초 등 2곳이나 됐다. 광주중앙초는 1970~1980년대 광주 최대 변화가였던 금남로 인근에 위치, 당시 학급 수 90여개, 학생 수 5000여명이나 된 큰 학교였지만 2000년대 들어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인해 지난해 신입생 1명, 올해는 0명이 됐다.

전남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초교 취학 아동 수가 1만958명으로 지난해보다 493명 감소했고 예비 소집 참석자도 9723명으로 전년보다 359명 줄었다.

특히 ‘신입생 0명 학교’가 더 두드러진다. 총 34곳으로, 지난해보다 3곳 늘었으며 이중 본교는 23곳, 분교장은 11곳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구조적 단계에 접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이 소규모학교 지원 강화와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폐교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교육 여건 악화로 학습권 보장도 어렵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지역 공동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붕괴와 공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화순군 전남 최고 결혼장려금 ‘효과 있네’

화순군의 결혼장려금 정책이 눈에 띈다.

아곳에서 혼인신고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층의 결혼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는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최고 금액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1년부터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을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를 도입했다.

시행 5년여가 지난 현재 이 제도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 감소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총 321쌍의 신혼부부에겐 17억원의 결혼장려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52쌍은 최대 지원금인 1000만원을 받았다.

지급 대상 부부 중 근무지 변경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28쌍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부부가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혼장려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화순을 생활 터전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주 정책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 후 또는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해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년 100호씩 만원주택 제공,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지원금, 신혼조리 비용 지원, 다둥이 육아 용품 구매비 등 결혼에서 출산·양육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이들의 화순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출생아 수가 2022년 178명, 2023년 212명, 2024년 255명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270명이던 순인구 유출규모도 2024년에는 24명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층의 정착 유도를 위한 결혼장려금 등 화순군의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